

데스크 시각

‘청춘의 꿈’을 응원한다



김미은 문화1부장

중학생 소녀는 집에 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고 남극을 동경했다. 이후 남극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동경과 정보 수집 차원에 머물던 남극 행(行)은 2012년 여름, 세종기지 의료담당 대원이었던 고경남씨가 펴낸 책을 읽고 현실의 목표를 다다랐다. 책을 읽은 그녀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고, 그가 근무하던 병원으로 찾아가다.

남극을 향한 안나의 꿈

남극 행 소식을 들은 고씨는 “내 책을 보고 남극을 꿈꾼 이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남극을 찾은 이는 안나씨가 유일하다”고 격려했다. 남극 관련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해외 기지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 뉴질랜드, 독일까지 날아가 대원을 인터뷰했다. 세살배기 아들을 둔 엄마로 육아의 부담도 있었지만 그녀는 꿈을 향해 전진했다. 여러모로 힘들 남극 생활이었지만 남극에서 행복하고, 재미있게 보내려 한다.

우여곡절 끝에 남극에 안착한 그녀를 보면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등장하는 유명한 글귀가 떠올랐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되고, 그 우주는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는 또 있다. 지난 연말 청년문화기획자들의 송년 모임에 들렀다가 ‘코끼리 공화국’ 회원에게서 재미있는 명함을 받았다. ‘셀프 어워드’를 소개하는 명함이었다. 지역에서 문화기획자로 사는 건 아직은 미래가 불투명한 일. 열정 가득한 청년을 추천해 달라고, 외롭고 힘들었던 청년을 위로해 달라는 멘트와 함께 스스로 상을 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상 부문은 ‘땀 좀 흘려다가 받은 상’, ‘쓴 맛 보고 받은 상’, ‘땀 대로 되라 상’, ‘알게 모르게 대상’이다.

지난해 광주일보 문화부는 지역 젊은 문화기획자들을 소개하는 시리즈 ‘그들의 유쾌한 상상-문화판을 바꾸다’를 진행했다. 엉뚱하고 발칙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그들은 자신들을 ‘재미’에 눈 뜬 세대라고 표현했다. 일상이 문화라는 말도 했다.

지자체, 상상력을 포용하라

“저것들 시집잡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즐거워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춘들은 주인공이라는 생각보다는 하수생이나 사랑할 손님 정도였다. 재미와 주인공 의식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다.”

청춘들의 패기 넘치는 기운을 수월받으려 올해 시즌 2를 다시 시작해 볼 생각이다.

젊은 청춘들의 상상력을 포용하는 건 지역 문화계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면 상상력이 단허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침 전남도와 광주시가 ‘청년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고정 목표를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으로 잡은 전남도는 60명 규모로 ‘전남 청년의 목소리’를 구성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인재육성과를 만들었다. 또 광주지역 청년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광주청년센터’(가칭) 개설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가 옛 질병관리본부센터에 만든 ‘청년 일자리 허브’를 찾았을 때 느꼈던 활기찬 기운이 퍼지길 기대한다.

지난 연말 들었던 견배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2015년은 신나고 재미있게 노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통장에 찍히는 행복보다 마음에 찍히는 행복’을 꿈꾸며 달려가는 청춘, 유쾌한 판을 벌일 공리에 바쁜 청춘들과 함께라면 나도 멋진 ‘노는 놈’이 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하다. /mekim@kwangju.co.kr

社說

한전 공사계약 비리 수사범위 확대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동안 납품비리로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는 전력그룹 본사인 한국전력이 공사계약 비리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기업체 노조에서는 “타길 게 타졌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리가 만연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광범위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12일 한전 광·전남지역본부, 서울지역 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 3명을 체포하고 근무지를 압수수색했다. 체포된 3명은 전임직과 현 근무지인 나주시사의 업체간 공사 계약과정에서 뒷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제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전기공사사업자들에게 일감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전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업체들이 역대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공사와 관련한 업체와 발주처 간 유착은 비리의 전형이다. 지난 1년간 각종 비

리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256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계약관련 비리가 가장 많았다. 이번 사건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고질적인 비리 사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개인비리 차원을 넘어 업체들의 비자금 조성과 연관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니 수사범위를 확대해 검은 고리의 원천을 밝혀내길 바란다. 특히 한전의 경우 각 지사별로 2년 단위 공사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한번 떠났지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검은 고리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나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노조의 지적을 감안하면 한전의 다른 지사에서도 비리 발생의 소지는 다분하다.

문제는 공공기관 비리가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품수와 편법을 막을 제도적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고, 비리가 싹을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광주 시내버스 혈세 낭비 이대론 안 된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면서 부적정한 이윤 산정 등 부실 관리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부가 지정한 기준 대신 자체 기준을 적용해 지난 2013년의 경우 국토부 기준 40억 원보다 25억 원이 많은 65억 원을 지원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실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도 미리 정해 놓은 표준원가에 따라 지금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한다. 차량보험료의 경우 표준원가보다 실제 납부액이 적은데도 광주시가 업체에 3억4000만 원을 초과 지원했다. 건강보험 등 복리후생비도 표준원가와 납부액 차액이 무려 7억1000만 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업체는 시에서 지급받은 차량 연료비 수익 원을 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특수차량을 일반 화물차량으로 불법 개조, 중차된 344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69억 원도 회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도 관리 부실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니 광주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광주시는 지난해 2006년 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첫해 196억 원의 적자를 보전했었으며, 7년만인 지난해에는 2배에 달하는 39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2175억 원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가 하면 버스업체 대공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등 불투명한 경영과 직접금 유용,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 조건을 참고한 뒤 노조와 합의해 이윤을 산정했다고 밝혔으나 예산 낭비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국토부의 기준에 맞춰 지원을 해야 한다. 아울러 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도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이병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교수

망공 회항과 허수아비 춤

가’를 한다. ‘모두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죽일 뎀입니다’고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특별 면회시간 30분 동안 피도하듯 이 말을 울부짖으며 이마를 바닥에 짚으며 엎다. 이같은 부하의 충정에 회장은 ‘내 자식보다 낫다. 아니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 말한다. ‘그 황송하기 그지없고 성은이 망국하기 이를 데 없는 말로 면회부 수어인 동시에 재신임’을 받게 된다. 그 임원은 더욱 감격하여 새롭게 박치기를 해냈는데 이름하여 ‘감읍의 박치기’다. 이 박치기 사건 후에 그 사람은 완전 실세로 굳히게 된다.

대한항공 망공 회항 사건은 잘 대응했으면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났을 일이다. 사태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고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받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위기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하늘과 땅차이만큼 달라진다. 사건 이후 전개되는 일들은 국민의 여론보다는 조 전 부사장의 안위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것으로 비춰졌다.

대한항공은 사건 발생 다음날을 그냥 보내고 2일이 지난 오후 9시가 돼서야 반

쪽짜리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의 사과는 없었고 조 전 부사장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이건 사과문이 아니라 옹호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진정이 되지 않자 조양호 회장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를 했지만 이 또한 ‘각본’사과문 논란에 휩싸였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장면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귀위 임원을 포함한 40여명의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나와서 조 전 부사장 인터뷰를 두고 몇 번의 사전 ‘리허설’을 진행했다. 조 전 부사장이 사용하지 않던 조사실 옆 여자화장실 정소를 다시 해달라고도 했다. 이같은 행태는 언론에 ‘초호화 휴유’와 ‘과잉 충성’으로 보도되어 네티즌들이 ‘대통령 급이네’, ‘갑중의 갑이네’ 하며 조질기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대한항공의 한 임원이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불법로 비활동을 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증거인멸 상황 보고했다. 자신의 로비 역량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때문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개인의 잘못에서 시작한 ‘망공회항’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까지 이제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의 유착 관계, 이른바 ‘망공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

이번 ‘망공 회항’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개인의 잘못에서 시작한 ‘망공회항’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이제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의 유착 관계, 이른바 ‘망공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 이번 ‘망공 회항’에서 비롯된 일련의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개인의 잘못에서 시작한 ‘망공회항’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이제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의 유착 관계, 이른바 ‘망공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고교 공동지원제, 광주·전남 교육 균형발전 저해

한 요인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꼽았다. 아울러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학습 네트워크 구축, 감성적 학습환경 조성,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적시에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첨단학습환경 구축’ 등을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먼저, 2018년까지 14개 학교(유치원 4, 초등학교 5, 중학교 3, 고등학교 2)를 설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유·초·중·고 각 1개교가 문을 열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또 2016년 개교 예정인 빛누리유치원을 1년 앞당겨서 임시 개교할 계획이며, 혁신도시 인근에 1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칭)금천생태유치원(12학급, 232명)을 개원할 예정이다. 이는 혁신도시 내 유아 수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빛가람혁신도시에 설립되는 학교는 최고 패적인 교육환경을 갖춘 전당이다. 이미 개교한 학교는 물론이고 추후 설립 예정인 학교에 대해서도 친환경소재를 이용한 시설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마스트 등 미래형 선진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별로 무선망 구축 및 전자칠판, 전자교과, 스마트 단말기 등 스마트

기자재를 보급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간 개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감축(초 24, 중 24, 고 20)해 운영토록 했다.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를 위해 혁신도시 내 초·중·고교 전체 학교에 대해서 수준별 수업은 물론, 학생지원 맞춤형 시간제 교사 지원과 우수교원을 확대 배치하고 있으며, 임직원 자녀 고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특수목적고인 전남과학교와 전남의국외고의 학급을 증설해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규정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해 교육청은 물론 지역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의 고교 공동지원제가 거론되면서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움직임은 균형발전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며 혁신도시의 성공 여부마저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는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남평중학구를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여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교육청이 협의

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관련 규정에 의해 광주와 고교 공동지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광주·전남 고교공동지원제’는 전남·광주 교육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전남의 학생들이 광주로 진학하게 되면 광주지역 성적 하위 학생들이 전남으로 역류하게 돼 지역 학부모의 반발과 전남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인구 유출 방지 효과와는 상반되게 광주로 진학한 학생의 생활외도 문제로 결국에는 학부모도 광주로 이주하게 될 것이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양시의 경우 시세의 5%를 지원하는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전남 최초로 제정해 지역인재 육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노력도 다르지 않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이기주의를 극복한 협력에 있다. 균형발전과 상생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노력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교육청이 협의하고 정하는 바에 따라 고 인접한 고등학교

無 等 鼓

퇴계 이항과 고봉 기대승, 두 사람을 가르켜 각각의 호 첫 글자를 따 ‘퇴고(退高)’라고 부른다. 조선 성리학의 최대 논쟁으로 유명한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의 당사자들이다.

퇴고가 처음 만난 것은 1558년 10월이었다. 58세의 퇴계는 요즘으로 치자면 교육부장관쯤 되는 성균관 대사성이었고, 고봉은 막 과거에 급제한 32세의 풋내기 선비였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퇴계가 사망하기 한달 전인 1570년 11월까지 1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편지를 주고 받았다.

지녀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학문의 힘을 나날이 담급질한 뒤에야 발꿈치가 단단히 땅에 붙어서 세속의 명예나 이익, 위치에 얽어지지 않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기 선달에게--병든 몸이라 문 밖을 나가지 못하다가 덕분에 어제는 마침내 뵈고 싶었던 바람을 이룰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요”

퇴계가 요양 중인 자신을 찾은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자 고봉은 오히려 이별을 아쉬워했다.

“삼가 가르침을 가까이에서 받고 보니 깨닫는 것이 많아 황홀하게 침착했고 그래서 오래 머무르며 모시고 싶었습니다”

26살의 나이 차이에도 사상의 로맨스를 펼친 퇴고는 2년의 시차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을 보여준 퇴고의 정신은 500년이라는 시간과 영호남이란 공간을 뛰어넘어 안동과 광주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퇴계와 고봉의 후손들이 20년째 학술 대회를 열고 있다니 참으로 아름다운 교류를 하고 있다니 감동이다. 다행히 바가 크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퇴고, 소통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상·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기획국 227-9600	〈F A X 222-8005〉〈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42	여론대체부 2200-696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광고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그 램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